

#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재계 “소남발, 경영권 흔들” 우려

일명 '3% 룰' 등 경제계가 반대해 온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결국 통과했다. 경제계는 그동안 지적해 왔던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선출시 주주합산 의결권 3% 제한 등의 내용이 그대로 통과된 데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경제 8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입장문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 조성이라는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사 충실의무 확대, 소송 남발 우려  
경제계가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의 주요 항목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 선임·해임시 의결

“이사 충실의무 확대, 소송 남발 우려”

“3%룰, 투기자본 이사회 장악할 수도”

전자·현장 주주 병행 의무화 등도 걱정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 조속 논의”

권 제한 강화 ▲독립이사(사외이사) 비중 확대 등이다.

이사 충실의무는 현행 '회사'에서 이제 '회사 및 주주'로 대상이 확대된다.

재계는 경영 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주주들이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이나 배임죄 고발 등 소송을 남발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또 국내 소액주주의 주주까지 실현보다는 외국계 헤지펀드가 경영권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사가 다양한 주주들의 이익을 모두 확인하고 합치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신속한 투자 결정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많다.

◆3%룰, 투기자본 이사회 장악 우려

상법 개정안에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가 감사위원 선임·해임시 최대주주의 경우 특관계인과 합산해 3%까지만 의결권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에 한해 합산 3%를 적용했는데 이를 모든 감사위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재계는 대주주가 의결권 3% 제한을 받는 반면 투기 자본은 일명 '지분 쪼개기'를 통해 모든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져 이사회를 투기 자본이나 헤지펀드 세력이 장악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적대적 인수합병(M&A)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기업 성장에 필요한

R&D·시설투자 자금이 경영권 방어에 사용될 수도 있다.

감사위원은 이사로서 중요 사항에 대한 결정 권한과 기업 감사 권한까지 갖고 있어 경쟁 기업이나 해외 투기 자본이 지지하는 감사위원이 선임될 경우 해당 기업의 주요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전자주주·현장주주 병행 의무화도 걱정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가 전자주주 총회와 현장주주 총회를 의무적으로 병행 개최해야 하는 것도 기업별 준비 상황이나 주주 선호를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전자투표 플랫폼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로 전자투표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면 오히려 각종 소송에 휘말려 기업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힘들 수 있다.

상장사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2조원 미만 회사의 경우 수를 전체 이사 4분의 1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도 경영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현재도 상법상 사외이사 자격요건 및

| 상법 개정 주요 내용 |                                    |                                    |
|-------------|------------------------------------|------------------------------------|
|             | 현행                                 | 개정안                                |
| 이사의 충실의무    |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 '회사 +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
| 집중투표제       | 이사 선출 시 소액주주의 영향력을 높이는 제도로 '정관' 선택 | 집중투표제 의무화                          |
| 전자 주주총회     | 이사회 결의로 도입                         |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 허용<br>대규모 상장회사 의무화    |
| 감사위원 분리 선출  | 1명은 대주주가 뽑은 이사 중에 선출하지 않고 분리선출     |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                      |
| 3% 룰        | 개별 3%                              | 감사 선임 시 최대주주·특관계인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 |
| 독립이사제       | '사외이사' 명칭 사용                       | '독립이사'로 변경 및 독립성 강화                |

25.07.02 인지혜 기자 hokma@newsis.com

결격 사유는 엄격한 편이어서 사외이사 인력풀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제 8단체는 “국회에서 경제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시 제도를 보완하겠

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 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

## ‘로드맵 초읽기’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조기 재가동되나

### 사측 ‘고용안정 최우선’ 방침... 현실적 대안 1공장 활용 ‘솔루션’

큰 불이 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화재 수습 로드맵 발표가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1공장을 중심으로 한 공장의 조기 재가동 결정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3일 지역 경제계와 타이어업계 등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조만간 공장 정상화 일정과 보험 접수, 민원 해결 등 화재 수습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화재로 인해 현재 휴업에 들어간 근로자의 고용불안감을 반영한 듯 사측은 ‘고용안정’을 최우선시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져 로드맵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별써 1공장을 중심으로 한 공장 재가동 설이 회사 안팎에서 술술 들리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화재 발생 이후 광주공장 재건, 합평으로 공장 이전, 유럽 신공장 건설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지만 일터를 잃고 집에서 쉬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현 공장을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광주공장 재가동 방안은 불에 타지 않은 1공장과 40% 정도 남아 있는 2공장을 활용해 최대 하루 1만본의 타이어를 생산한다는 구상이다.

기존 1공장에서는 반제품을 결합하는 성형공정과 타이어 형태로 만드는 가류공정이 이뤄지는데, 반제품을 만드는 설비만 추가하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고무를 이용해 타이어를 생산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고무를 만드는 정련공정은 완전 소실된 만큼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이나 하남산단 내 고무업체에서 고무를 공급 받으면 된다.

타이어 생산 이후 공정은 2공장 중 불에 타지 않고 남아 있는 40% 공간에 있는 검사공정, 선별 공정, 출하 공정 등을 거치면 된다.

설비 추가 등을 위한 비용은 최대 5000억원으로 추산되는 화재 보험 보상비로 감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구상이 현실화되면 최소 1일 4000본, 이후 성형·가류 공정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면 하루 1만본(연 350만본)까지 생

산이 가능하다.

노조는 “1만본 규모로 재가동이 돼야 광주공장 소속 노동자 1800여명 중 500명 이상은 투입돼 신공장 건설까지 순환근무를 통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측의 로드맵에 장기적으로 광주공장 합평 빛그린산단 이전 방안도 나오지 주목된다.

지난 2019년부터 검토됐던 광주공장을 합평 빛그린국가산업단지로 이전하는 방안은 공장부지를 상업용지로 바꾸는 용도 변경 문제, 1조2000억원 가량의 매각 비용 확보 등의 여러 문제로 지지부진했지만, 이번 화재로 인해 공장이전이 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협력 지역 경제계 한 인사는 “화재 발생 이후 1800여명의 생산직 근로자들이 휴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유급 휴업이라고 하지만, 근로자들의 생활고는 물론, 협력업체 등 지역 경제계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조속히 1공장 등을 재가동하는 방안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

###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서 “의료대란 해답 찾아보자”

### “특정 이해관계 아닌 건강권, 바람직한 의료체계 관점에서 접근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후 두 번째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어려운 의제로 생각했던 의료대란 문제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해답이 있을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어쨌든 이 문제도 특정 집단, 특정인들의 이익이나 이해 관계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권,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어떤 게 바람직한지 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는 대화 분위기가 꽤 조성되고 있다고 하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연히 관련 의사단체들, 의료단체들과의 대화도 치밀하게, 섬세하게, 충분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해양수산부 이철을 비롯한 부산 지역 공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는 당부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금 해수부 이전 가지고 여기저기서 말이 많은데, 국토 균형 발전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일부 중앙정부 행정기관을 부산으로 옮기는 그 타당성에 대해 많은 국민이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달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은 기대가 꽤 많은 것 같은데 관련해서 HMM 이전 문제, 더해서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문제 속도도 내서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뉴스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유진건설산업(주)**

**철근콘크리트공사**

**광주시 서구 상무누리로 14, 502**  
**(062)-655-1370**  
**대표이사 정길화**